

[편집자에게] 정부 공사 '반값 낙찰' 이대로 좋은가

이종광·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2010.02.16 23:02



▲ 이종광·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정상적 시공이 가능한지 가능성이 어려울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5개 공구 입찰에서는 절반이 넘는 3개 공구의 낙찰률이 50%대에 머물렀다. 특히 금강 5공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1260억원의 50.24%인 633억원에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예정금액이란 정부가 이 정도 금액은 돼야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힌 공사의 가격이다. 그런데 단 50% 비용으로 시공하겠다는 건설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품질을 담보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정부 공사의 낙찰률 하락은 정부의 가격 중시 정책과 건설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1원이라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재정 집행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품질과 안전을 희생하는 수준까지 건설공사 가격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연일 화재가 되고 있는 도요타자동차 리콜의 배경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원가 절감정책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요타 생산방식 즉, 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품질과 안전을 희생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다. 바로 원가 절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우리 건설업의 현실도 도요타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가격 인하와 맞바꾸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건설공사 가격 하락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세계적 불황 여파에다 주택시장마저 잠잠한 요즘 건설업체들도 적자 공사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적자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일까. 돈을 쏟아내는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하도급공사의 가격을 낮추어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공공연하다. 수익 없는 공사를 계속 수주한 건설업체는 언젠가는 페달이 돌지 않는 자전거처럼 넘어지게 된다. 피해는 하도급업체·자재업체·건설노동자에 걸친 산업 전체로 파급된다. 정부도 당장 예산 절약이라며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저가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부실공사의 최종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다. 자동차처럼 리콜이라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으려만 건설공사는 리콜도 안 된다.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가 준 품질과 안전이라는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듯하다. 우리는 이 사건들은 망각해도 좋을 만큼 멀리 와 있지 않다.